

# 금융부문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 모색(2)

---

2009.2.3 | 박형준/새사연 연구원 | [hjpark@saesayon.org](mailto:hjpark@saesayon.org)

---

## 목 차

1.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기본양식
2. 상품화와 가격 그리고 자본주의 권력양식
3. 금융, 자본주의 권력의 언어
4. 새로운 체제는 은행의 공공화에서 시작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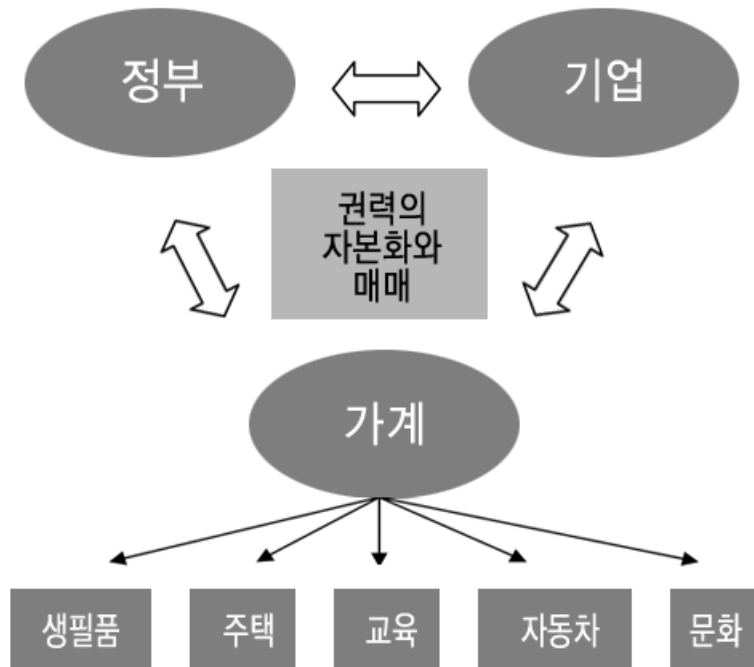
<http://saesayon.org>

### 3. 금융, 자본주의 권력의 언어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본화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하면서 이번 전 지구적 정치경제적 위기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자.

그림4는 경제학 교과서에 흔히 볼 수 있는 경제주체 간의 관계를 조금 고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시계 방향으로 실물이 순환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화폐가 순환한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순환도에서 전체 실물의 가치와 화폐의 총량이 일반적으로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이는 - 자본과 노동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 각각의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이들의 소득은 다시 소비시장에서 생산물의 정확한 가치와 교환되고, 남는 돈은 저축과 투자의 균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세이의 법칙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자본주의적 분배 정의를 대변하고 있다. 물론 현실은 다르게 작동한다. 실제 세계에서 가치의 결정은 사회 주체 간의 권력의 크기를 반영하는 자본화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4. 사회적 통제력의 자본화와 그에 따른 신용도



##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 vs 자본시장 영역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자본화는 보편적인 자본주의의 질서양식이지만 두 가지 다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돈, 즉 화폐도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으로서, 화폐가 교환쿠폰처럼 쓰이는 곳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화폐를 교환수단/가치의 평가수단/가치의 담지체 등으로 정의하면서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이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영역과 ‘비슷하지만’ 그들의 주장처럼 생산성(좀 더 엄밀하게 한계생산성)에 근거한 가치가 실현되고 교환되는 장이 아니고, 사회적 권력을 반영하는 자본화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가진 상품이 교환되고 소비되는 곳이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다른 노동자들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조직된 노동의 힘으로 지난 20년간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사주들, 즉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르는 자본가들의 사회적 힘이 다른 중소 자본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큰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청기업들이 겪는 ‘불공정’ 거래는 이러한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마트 같은 대형소매점이 물건을 싸게 공급하거나 증정품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같은 경우다. 그들 간의 힘의 차이는 상품의 가격결정력과 이윤의 크기를 결정하는 힘으로 표현된다.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은 우리가 흔히 자본시장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러한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 대한 자본의 장악력이 금전적 가치로 평가되고 전환되어 교환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원유와 곡물 등의 상품시장, 부동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본가들은 직접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함으로써 이 시장에 참여하거나 상업은행, 투자은행, 뮤추얼 펀드, 헤지펀드, 보험회사, 연금 회사 등등 여러 금융기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는 원칙을 전문 경영자들에게 강제함으로써 이 권력시장에 참여한다.

물론 우리가 ‘개미’라고 부르는 일반인들도 여기에 참여한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미들이 하는 유가증권 매매는 권력획득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지배적인 사회세력의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개미들의 참여 증가는 사회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투자자, 판매자, 구매자이며,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주류의 소유권 사회 이데올로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동자와 서민들을 자본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은 지배 세력이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에서 분배한 부를 재흡수하는 제도적 장치다. 운 좋게 높은 수익을 얻은 개미도 종종 나오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 영역에서 결국 그 동안 안 쓰고 모아 둔 돈을 날리고 만다.

### ‘부채의 사회화’ 를 위한 ‘전반적 위기’ 담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적 정치위기는 이 두 영역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세력 간의 싸움이 전개되는 과정 중의 ‘자연스런’ 한 부분일 뿐이다. 호황일 때와 마찬가지로 불황일 때도 부와 권력은 재분배 된다. 전반적 위기라는 개념은 지배 이데올로기이다. 지배세력은 국민적 위기라는 공포감을 조성하여 자신들의 사적인 부채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부채의 사회화’를 별 저항 없이 이루어 낸다. 2008년의 키워드는 미국을 위시로 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정부가 실시한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다. 이들이 쓰고 있는 유동성 공급이란 단어는 사실 부실자산을 국가가 사들이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채권자들의 손실을 메워 주는 부의 재분배 방식을 의미한다. 교묘하게 사회적 의미는 감추고 화폐의 순환이라는 기술적 의미만을 부각시켜 사용하고 있다.

부채의 사회화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것을 강요받지만, 정작 대부분의 민중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로 몰린다. 그림1에서 본 것처럼 정치경제적 위기 시에는 자본화에서 위험률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신용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는 더 높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 가뜩이나 높은 제도권 은행의 문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살인적인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돈을 빌리게 된다. 사채시장이 아니라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이 낮아지면서 자산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면, 많은 민중들은 부채상환 능력에 타격을 입고 자신들의 ‘알량한’ 재산마저 잃게 된다.

물론,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일부 자본가는 이 싸움에서 영원히 재기 불가능할 정도의 상처를 입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림2와 3에서 보았듯이, 지난 한 세기 동안 크고 작은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일부 개별 자본이 떨어져 나가긴 했겠지만 자본-노동 간의 전체적인 싸움과 자본 간의 싸움에서 지배 자본은 권력과 부를 더욱 더 집중시켜 왔다. 다만 자본 분과 사이에 헤게모니의 이동이 있었을 뿐이다. 이것이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위기의 본질 역시 부와 권력의 재분배를 놓고 벌이는 사회적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말이다.

### 위기의 근원은 시장의 본성인 ‘불균형’

많은 ‘양심’ 있는 저명한 학자들이나 언론의 컬럼니스트들이 금융규제 완화, 낮은 이자율 정책,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차입 투자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금융시장의 폭락 →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이번 위기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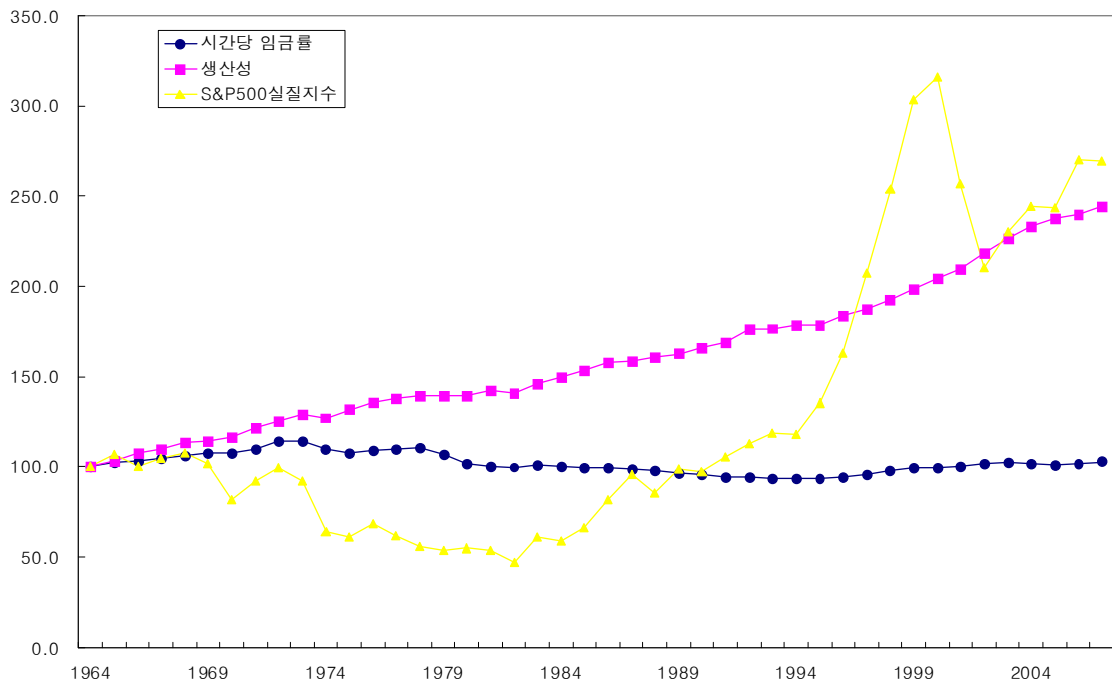
이러한 원인분석은 자연스럽게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복귀’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설명과 주장이 다 맞는 말이지만, 위기의 원인을 위기가 표면화된 계기에만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시장의 본성이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이라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시장은 주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가치가 정당하게 교환되는 균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놓고 전체 자본과 노동, 그리고 자본 사이에 벌이는 싸움을 표현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러한 불균형성, 즉 권력의 집중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세력 간 분배의 불균형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의 유형이고, 이번 위기는 이러한 본질이 표현된 것이다.

### 자본의 ‘나와바리’ 확장 전략

그림5는 민영화 (또는 사유화), 자유화,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전체 자본과 노동 사이의 역관계에 가져온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5. 미국의 실질임금률 변화, 생산성 변화, 실질주가지수 변화

(1964년=100으로 환산), 출처 : 미국 노동 통계국, US Census Bureau의 자료를 가공함



민영화와 자유화는 자본이 자신들의 전체적인 ‘나와바리’를 확장하는 전략이다. 즉, 공간적 영역의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아직 공적 영역으로 남아 있는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을 사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보건의료/연금/보조금 등 사회복지체도를 축소함은 물론 영리추구의 장으로 바꿔내고, 아직 자본주의가 완숙하지 않은 소위 이머징마켓을 세계화 깃발 아래 통합해 내면서 자본축적의 토대를 확대해 왔다.

노동유연성은 노동 조직을 와해시켜 케인즈주의 체제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온 대자본과 조직된 노동 간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이었다. 이 싸움에서도 자본은 꽤나 큰 성과를 올려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노동자들이 받는 실질적 시간당 임금은 생산성 향상에 비례하여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 미국의 핵심적 자본의 힘

을 표현해 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 S&P500의 실질지수는 1980년을 전후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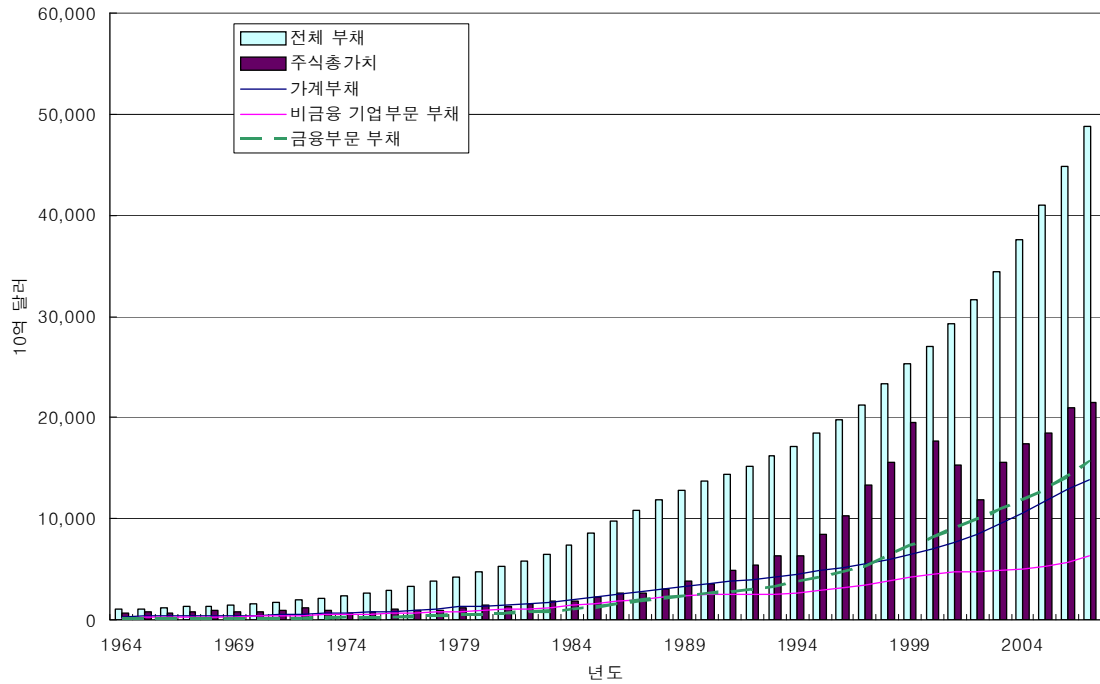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진 자본시장의 급속한 확대는 우리들의 사회적 삶의 영역 중 보다 많은 부분이 사유화 되고, 그에 대한 지배적 자본의 장악력이 확장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엄청난 규모로 확대된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시장과 더불어 뮤추얼 펀드, 공적/사적 연기금, 헤지 펀드, 사모펀드,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등 자본시장을 이끌어 가는 기관들의 성장은 내용(권력)의 확대와 걸맞은 형식의 ‘발전’이었다. 즉,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이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기본양식인 자본화에 포섭되었고, 소유권 사회의 허구적 이상이 더 깊숙이 민중들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음을 의미한다.

### **‘갈 때까지 간 체계’ , 그러나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본화는 미래의 수익흐름을 현재가로 할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중들의 신용거래는 그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이다. 그림6은 신자유주의 체제 하의 자본축적은 부채의 축적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축적이 늘어난 만큼 민중들의 삶이 이 체제에 더 많이 포섭되었으며 그들의 미래의 수익을 거의 모두 미리 당겨서 써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금융시장의 폭락은 당연한 결과이다. 위기도 자본주의 약육강식 권력게임의 한 부분이며, 이러한 신용화폐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의 본질을 드러낸다. 호황 때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라도 있지만, 불황은 더 냉혹하게 사회적 약자에게 타격을 가한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된 정치경제적 위기는 결국 부와 권력의 상향재분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 왔다.

이번 전 세계적 정치경제 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 체제가 ‘갈 때까지 갔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그 안의 가장 낮은 사회 계층을 권력 게임에 끌어들이었다는 사실은 한 국면이 끝나고, 다른 자본주의 국면으로 전

그림6. 미국의 부문별 부채와 총계, 그리고 주식가치, 출처 : FRB



환해야 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정치경제 체제로 나아갈 것인가는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노동자와 서민들이 스스로의 요구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다시 지배적인 사회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를 요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음 절에서 간략히 다루며 이 글을 맺도록 하겠다.

#### 4. 새로운 체제는 은행의 공공화에서 시작하자

마르크스의 말대로 자본은 사회적 관계의 물화이며, 자본주의적 위기는 그 관계에 내재된 모순에서 기인한다. 그렇기에, 그 사회적 관계가 다른 형태로 바뀌기 전까지는 위기가 반복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근원적 해결책을 지금 사태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주객관적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방향은 그 쪽으로 향하되, 걸음은 좀 작게 땀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의 진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 사유화와 상품화 영역을 확대하고, 자본화를 통해 그에 대한 장악력을 가



치 매기고 거래하는 금융자본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부와 권력은 점점 더 소수의 지배적 사회세력에 집중되었고, 이는 금융적 불안정성을 증폭시켰다. 그러므로 위기-이후의 새로운 체제는 이와는 반대로 공공 영역의 확대와 함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노동의 안정성 강화를 기본 골격으로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은행의 공공화가 이런 흐름을 만드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

### 화폐의 두 가지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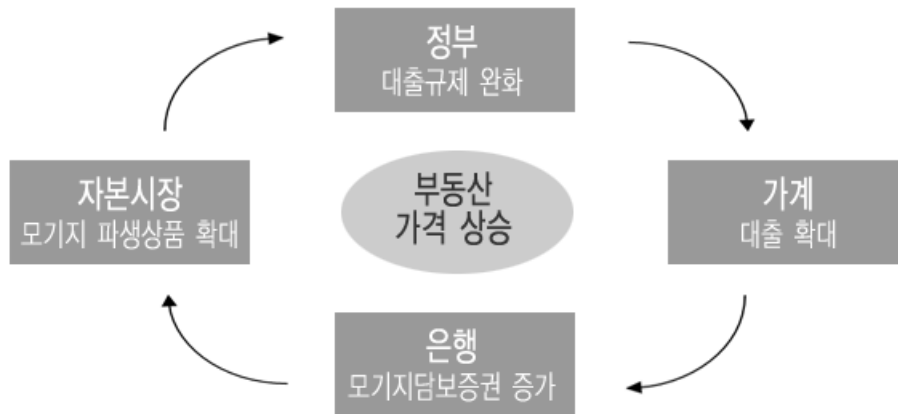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본화의 두 가지 차원의 영역에 따라 화폐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을 지닌다.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 필요한 소비재와 생산재를 사고파는 데 쓰이는 보편적 상품권 같은 역할을 하는 화폐와 그 과정을 지배하는 권력을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는 화폐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재와 생산재의 가치의 결정과 그것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능력을 결정하는 임금도 사회적 권력의 크기를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영역은 서로 얽혀 있다.

또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주택은 자본화 되어 주요 자본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림6에서 미국의 가계부문 총 부채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14조 달러인데, 그 중 거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그 나머지는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결제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금취급 기관의 대출 중 가계대출이 약 500조 원인데 그 중 250조 원이 주택관련 대출이라고 한다. 이러한 긴밀한 연관성 때문에 자본시장의 동요가 곧바로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충격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에서 화폐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분석적으로 가능하고 유의미하다. 현재는 두 가지 영역의 경계선이 매우 흐릿해졌지만, 그것을 구분해야만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진행되어 온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변화를 제시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영역에서의 화폐는 사회적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혈액순환과도 같은 것이다. 이 영역의 화폐가 권력게임의 화폐에 종속되면 될수록 우리의 사회적 삶의 불안정성이 증폭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림7. 주택의 자본화



###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자본시장으로 보호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번 위기의 도화선이 된 것은 주택의 자본화와 연관된 파생상품 시장이었다. 누구나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며 집값 상승을 통해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만연했고, 소득이 낮은 서민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낮은 이자율과 금융시장 규제완화를 추진한 국가기구, 각종 은행의 묻지마 대출 정책, 모기지 증권을 일종의 파생상품으로 전환시켜 유통시킨 자본시장의 ‘혁신’이 결합하여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 사이렌처럼 모두를 홀렸다. 미국의 가계부채 14조 달러 중 약 11조 달러는 주택대출이고, 이 중 6조 달러 정도는 모기지담보증권(MBS)로 유통되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렇게 발행된 MBS를 모아 여러 형태(CDO 등)로 증권화, 재증권화 하여 유통시켰고, 그 규모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담보물과 증권의 연계를 보증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도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위험률이 높은 파생상품화 된 CDO에 A등급을 부여했다고 한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포화상태에 다다랐고 급격한 가격하락이 시작되었다. 내려올 땐 차례차례 단계를 천

천히 밟으며 내려오지 않는다. 블록을 쌓을 때는 하나씩 밑에서부터 올라가지만, 쌓여져 있는 블록의 밑받침을 빼버리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리듯이 자본시장에서는 부정적 투자심리가 지배하는 순간 모든 기존의 추세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한다. 경제 신문이나 TV의 자본시장 지수의 그래프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의 문제가 요동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예를 들었지만 다른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문도 자본시장과 연관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된 외환옵션 상품 중 하나인 KIKO가 많은 예 중 하나일 것이다. 사실 우리 삶에 필수품인 에너지와 곡물은 선물시장에 종속된 지 오래되었다. 이번에 단지 채수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자본시장과 연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을 소수 투자기관에게 내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정치경제적 위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위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자본시장과 투자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생산과 소비 영역과 자본시장 간에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그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영역의 화폐는 국가보증 교환쿠폰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화폐의 순환을 담당하는 은행은 사회의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금융 공공화를 위한 몇 가지 전략들

### 자통법 재고... 금융의 파생상품화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9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본시장 통합법부터 재고해야 한다. 이 법안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증권연구원의 글을 좀 길게 인용해 보겠다.

한국에서도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펀드화, 금융의 파생상품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증권자본주의는 금융의 증권화를 배경으로 태어났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대상들이 증권화 되고 있다. 부동산이 대표적 예다. 과거에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증권화를 통해 실물부동산을 유동화증권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부동산 대신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다. 부실채권을 포함한 대출도 증권화를 통해 증권으로 만들 수 있다. 금융의 증권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면 증권의 펀드화가 가능하다. 증권자본주의가 펀드자본주의로 진화한다. ... 최근에 펀드자본주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펀드가 단순한 투자이익의 차원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경영권에 영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수지분을 획득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진을 교체한다. 헤지펀드의 경우...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경영자 입장에서는 펀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 금융시장, 증권시장, 펀드시장, 파생상품시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이다. 금융자본주의, 증권자본주의, 펀드자본주의, 파생자본주의는 이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할 자본주의 모형이다 (김 형태, 2007여름, 자본시장포럼).

여기에 나온 거의 모든 내용이 요즘 국내외 신문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전세계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용과 같다. 금융의 증권화, 펀드화, 파생상품화의 결과는 참담한 정치경제적 위기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파생상품으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한다. 이러한 법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높은 수출입 의존도, 주식과 채권시장의 높은 외국인 비중으로 인해 야기된 견잡을 수 없는 사태를 겪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상상을 초월한다. 현실은 위의 인용문의 주장과 반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의 증권화, 펀드화, 파생상품화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토지, 주택, 에너지, 농수산물 등에는 공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대한 파생상품화를 금지시켜야 한다.

### 은행 공적 소유체제로의 전환... 두 세 개 은행에 대한 전략적 투자

2008년 9월부터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권에 이미 쏟아부었거나 앞으로 추가로 투입하기로 확정된 '공적 자금'이 3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산업과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무척 크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정부의 말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은행을 왜 사실상의 외국인 기업으로 유지시켜 놓고, 그들의 재산권을 30조 원이나 되는 우리 국민의 돈으로 지켜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표1. <시중은행 시가총액, 외국인 지분율>(조원, %)

금융지주	시가총액 (2008/12/1현재)	외국인 지분율	주요 지주
KB	10.7	55.9	국민은행 (20.7) CITIBANK, N.A. (13.76) 국민연금공단 (5.03)
신한	12	52.0	BNP파리바 S.A. (6.64) BNP파리바 룩셈부르크 (1.87)
하나	3.7	65.62	Angelica Investment Pte Ltd (9.6) GS Dejakoo, L.L.C. 외 (8.85) Capital Research and Management (6.08)
우리	5.7	10.76	예금보험공사 (72.97)
외환	4.5	74.9	론스타 (51.02) 한국수출입은행 (6.25) 한국은행 (6.12)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은 1997년 위기 이후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한국씨티은행, 한국SC제일은행 7개로 통합되었다. 이 중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제일은행은 100퍼센트 외국 자회사다. 우리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도 사실상 외국계 은행이다. 그리고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은행은 현재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상태다. 정부가 투입했거나 투입하려고 하는 30조 원이면 이론상 위의 5개 시중은행의 주식 전부를 인수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그런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국민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만든 은행에 대해 어떤 구체적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돈으로 기업에 대출을 하지 않고 다시 한국은행의 채권을 사는 방법으로 돈을 돌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말부터 3차례 실시한 환매조건부 채권 매각에서 시중은행의 응찰액이 각각 4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인 은행의 역할과 성격이 사적인 소유와 이윤추구와 충돌하는 데 있다. 생산과 재생산 영역의 금융과 자본시장의 금융의 구획을 확실히 하고, 전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성격에 맞게 은행을 공적인 소유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은행을 국유화 할 필요도 없고, 100퍼센트 정부지분을 확보할 필요도 없다. 그 중 두세 개의 은행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주요

지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안정적 예금 대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73퍼센트 지분을 매각하려는 계획도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 법정소송 중인 외환은행의 지분을 재매입하고 KB금융지주의 지분을 늘려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부는 1997년 위기 이후 이루어진 은행의 민영화와 외국인 기업화가 우리 국민경제에 어떤 이득을 주었는지 증명해야 한다. 그 동안 은행들은 이용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거두어들인 수익을 대부분 배당을 통해 외국인 주주들에게 재분배 해주었고, 그 결과 자기 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이번 위기 때 다시 애를 먹었고, 그에 대한 부담은 국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으로 만들어 민영화 할 계획을 취소하고 위에서 언급한 시중은행들을 공영화 해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금융의 공급을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국민연금을 통한 은행의 공공성 확보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민주적 운영 문제와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연결시키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08년 기금규모는 약 250조 원이고 이 중 17퍼센트인 42조 원 정도를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12년에는 예상되는 기금 규모가 약 415조 원이고,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규모도 20퍼센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약 83조 원에 해당한다. 최근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은 2008년에 주식투자에서 2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국민연금을 코스피 지수 떠받치는 데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도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민영화 기조에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독립된 운영조직을 통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치 사설 펀드처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한다. 국민들이 노후 준비금을 소위 투자전문가로만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손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는 투자 전

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자본시장이 반 토막 나는 현실을 목격했다. 우리들의 미래를 그들의 위험천만한 게임에 맡겨둘 수 없다. 연금을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 노동과 시민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감독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확립한다면, 은행과 몇몇 주력 산업업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연금 수익의 확보를 동시에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식 시장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강했다. 그런데, 은행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통상의 주식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식 시장에서 단기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는 목적의 투자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은행부문의 공공화를 전제로 한 투자를 의미한다. 공공화 된 은행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투자를 서민임대주택, 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교육시설, 생태환경 인프라 구축 등 공공서비스 SOC에 집중함으로써,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용은 물론 국가 기반시설과 주요산업에 대한 건실한 지배구조 유지를 동시에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